

일부 언론사의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1강2중1약’

약진 등 놓고 의견 엇갈려

이원택 의원 ‘상승세’ · 김관영 도지사 ‘다소 약진’

안호영 의원 ‘하락세’ · 정현울 익산시장은 ‘고전’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1강2중1약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약진과 상승, 침체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달 13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지 불과 한달 여만에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때보다 12.3%에서 5~6% 상승한 18%를 기록, 분명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주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의 경우 도민들을 상대로 한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31.7%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3~4%정도 높게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정현울 익산시장

나타난 35%를 기록해 다소 약진하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직무수행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평가에서 무려 54%를 기록한 반면 도지사 지지율 35%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긍정평가와 지지율이 20% 정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선 의원인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의원의 경우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7.7% 지지율을 기록하다 이번 조사에는 1.7%정도 빠진 16%를 기록, 다소 떨어진 추세를 보이

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예정 후보인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7.7%의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에는 7%로 나타나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이 5~6개월 남은 상태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지지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당분간 4자구도를 형성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교체 여론이 53%, 재선 선호 39%를 기록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권희성 기자



내년도 국비 확보 막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기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24일 기획재정부를 찾은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기재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민주 도당, 상임고문 등 주요당직자 임명

상임고문에 정세균 전 총리

김완주 · 송하진 전 도지사

김원기 전 의원 등 총 11명

고문단 · 부위원장단도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지난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직 정비 및 강화화를 위해 상임고문, 고문단, 부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임명은 당원과 도민의 존경을 받아온 전북의 명망가들을 통해 도당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각 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통해 정책적 전문성을 높여 지역과 현장에 더욱 밀착된 도당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당직자는 상임고문단 11명, 고문단 19명, 부위원장 15명이다.

상임고문으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원기·장영달·최규성·이강래·김성주·박민수·김수흥 등

7명의 전 국회의원들, 김완주·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있다.

도당 고문단은 주로 전직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출신들이다.

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는 황숙주 전 순창군수, 박우정 전 고창군수, 김승수 전 전주시장, 김생기 전 정읍시장, 이환주 전 남원시장, 곽인희 전 김제시장, 박성일 전 완주군수, 임수진 전 진안군수, 강완목 전 임실군수, 강인형 전 순창군수 등이 있다.

지방의회 출신으로는 최찬욱 전 전북도의회 의원, 권정숙 전 전주시의회 의원, 최진호 전 전북도의회 의장, 조현식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영배 전 전북도의회 의장, 박원조 전 전북도의회 의원, 문찬기 전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박명석 진안군 상임고문 대표와 소병홍 익산시를 수석부위원장도 고문단에 합류했습니다.

지방의회 출신으로는 최찬욱 전 전북도의회 의원, 권정숙 전 전주시의회 의원, 최진호 전 전북도의회 의장, 조현식 전 전북도의회 의원, 김영배 전 전북도의회 의장, 박원조 전 전북도의회 의원, 문찬기 전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박명석 진안군 상임고문 대표와 소병홍 익산시를 수석부위원장도 고문단에 합류했습니다.

이밖에, 당원과 도민의 구심점을 모으고 정책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계각층의 지도자 15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부위원장으로서는 노동계 및

직능단체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고진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의장, 박병철 한국노총 전주지역지부 의장, 이정현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지도위원이 있다. 또한 의료 관련 전문가로 백경환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회장, 신은숙 전북특별자치도 간호사회 회장, 심진찬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임명됐으며, 경제 및 산업계에서는 이인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최종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그 외 임명된 부위원장으로서는 김병이 임실군체육회장, 이종배 백산중학교 교장, 정태호 정읍고창 고문, 한명란 익산시를 여성위원장, 한병락 전 전북도당 부위원장, 한웅진 전북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급 당직을 임명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조직 정비와 강화화를 지속해 도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국 최초 RE100 지원 조례 ‘인정’

도의회,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조례 대표발의 이명연 부의장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 최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1일 울산전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명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알이백(RE100)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 분야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선도적인 입법 활동이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1건(광역 59건, 기초 42건)이 접수됐으며, 치열한 사전 심사를 거쳐 20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RE100 지원 조례

는 정부정책과 연계성, 지역 특성 반영, 의회 주도적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본선 발표경연 12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포함됐다.

이명연 부의장은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잠재력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친환경 산업 거점 도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문승우 의장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RE100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녹색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입법과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RE100 관련 조례는 이미 부산, 경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에 RE100 산업단지 조성 이 반영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2026년 예산안 등 심사

기획조정실 · 대변인 · 인권담당관 · 감사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4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에 대해 정책질의 및 2026년도 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재정 운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

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술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현재 지방채 규모가 3,500억원정도인데 공기관 위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정부 비중이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경

영효율화와 재정 책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은 내년 국가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는지 묻고 만약 국가예산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 차원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세입확충뿐만 아니라 세출구조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각종 민간보조금의 감액·절감 등 검토하여 실효성 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경산건위, 내년도 본예산 심사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은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유치와 투자 확대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

했다. 또한 해마다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나 전략적 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기존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방향 재정립을 요구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경제지속성장 협력 구축 지원사업 중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치는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사업에서 목적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산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재의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아 실제 폐업 소상공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노동 인식 개선 홍보사업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 방식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 홍보수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핵융합 인프라

사업 부지 선정 재검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와 관련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정이 사업 공고문의 부지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선정 기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군산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 힘써왔다. 전북 군산시는 우수한 접근성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연계 산업 기반 등 경쟁력을 내세웠으며, 타 후보지와 달리 부지 제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강조해 왔다.

도당 관계자는 “전북 군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과 국가 에너지 전략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 발표는 전북도가 핵융합 연구와 첨단 산업 기반 유치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담았다. /이만호 기자

“김용 전 부원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신속 판결을”

안호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축구의견서 제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윤종근·이재강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작성 논란이 겹쳐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의 장기 계류를 문제 삼았다.

특히 핵심 증언 반복, 녹취록 표현 변경 정황, 구술타이머 등 반증 자료를 언급하며 “사건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누적됐음에도 10개월 넘게 판결이 지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더 늦기 전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기자회견 이후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및 공정한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축구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구술타이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반복 및 변경 내용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민주 신영대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최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

업에 목적을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의 주거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해 공공임대 공급 기반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만호 기자